인천광역시교육청
ONE-STOP 민원기동대
☎1533-3232

경기일보
kyeonggi.com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 뿐입니다
인천광역시

1988년 8월 8일 창간 제9847호 안내 032-439-2020
인 천
음력 윤 2월 8일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인천 지하도상가, 10월부터 양도·전대 못한다

찬반 논란 16년 만에 '마침표'
시의회, 본회의서 관련조례 가결
위반땐 사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임차인 "市가 책임져야" 강력 반발

인천시가 16년째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 및 양도·양수 문제에 마침표를 찍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0월1일부터 전대로 운영하고 있는 점포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와 계약해지 등 행정절차에 나선다.

인천시의회는 28일 제285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의 지하도상가 15곳에 양도·양수와 전대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시의회는 종전 6월30일까지인 유예기간을 3개월 늘려 9월30일까지로 정하고, 남은 수익 기간을 모두 5년으로 통일했다. 조례에는 현재 재임차인(전차인)이 운영 중인 점포에 임차인이 장사를 포기하면, 전차인과의 지명경쟁을 통해 상가 운영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 소유의 자산인 지하상가 점포를 임차한 뒤, 다른 상인에게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인천에는 지하도상가가 등장한 뒤 조례에 따라 점포 재임대는 관행으로 이어왔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감사원은 2007년부터 시에 지속적으로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시는 결국 2019년 12월 지하도상가 조례를 개정하고, 점포의 전대·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유예기간 2년을 정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유예기간을 2025년까지로 늘리자 시가 이를 무효화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결국 대법원은 시의 손을 들어주며 조례가 효력을 잃자 시는 이번에 다시 개정을 추진했다.

우선 시는 행정처분에 앞서 점포 3천474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이뤄진 실태조사에서 3천474개 점포 가운데 48.9%인 1천700여곳이 전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지하도상가의 활성화 방안이 역시 과제로 남아 있다.

인천지하도상가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시의회와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같은 조례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전했다. 황민규 비대위원장은 "점포 1개에 우리의 삶과 생계가 달려 있다"며 "범법자로 만든 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최대한 임차인과 전차인의 설득 과정을 이끌어 내는 등 전대 현황을 줄이고, 평화로운 공유재산 정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혜기자

28일 오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한 협의체(TF) 제1차 회의가 열린 인천시청 앞 샤펠드미앙에서 단장인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추진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장용준기자

'2025 APEC' 인천 유치 온힘

市, TF 42명 1차 회의 개최
계획 점검·홍보 방향 '논의'

인천시가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인천 유치를 본격화한다.

시는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28일 1차 회의를 했다. TF에는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단장으로 군·구, 인천시교육청, 공사·공단 관계자 등 모두 42명이 참여했다.

시는 이날 첫 회의에서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계획을 점검한 뒤, 앞으로 유치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한 활동 방향을 설정했다.

시는 TF를 통해 올 상반기에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주력한다. 시는 하반기에 중앙정부의 APEC 개최도시 공모 신청에 필요한 협력과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통해 군·구·구 등 관계기관과의 다양한 지원 및 협력 방안을 찾는다.

이 정무부시장은 "내년 상반기 APEC 개최 도시 결정에 대비해 올해 유치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천의 역량을 모아 APEC 유치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열망을 전국에 알리겠다"며 "이를 통해 반드시 인천으로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급격한 기온변화… 산업계 지각변동

이슈M issue monthly

미래 위협하는 '기후재난' 공포

"어휴, 오르지 않은 항목이 없어요. 특히 전기가 엄청 올랐어요. 앞으로 더 오른다면 우리 같은 제조업체는 많이 힘들죠."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서 스테이플러 등 문구용품을 금형제작하는 오솔길 대표(39)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늘어난 불량품이 가장 큰 걱정이다.

오 대표는 "날이 너무 춥거나, 더워지면 제품 자체가 불량품이 생길 우려가 크다"며 "불량품이 다 손해로 잡히기 때문에 공장 수입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기료 상승에 따른 어려움도 마찬가지. 오 대표는 "지난달 전기료가 700만~800만원에 달한다"며 "경기가 어려워 부분 라인 가동을 하는데도 30%는 뛴 전기료에 놀랐다"고 했다. 이어 오 대표는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주물·열처리·금형 등 뿌리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전기 요금 치솟고 제품 불량품 속출
지역 제조·광업 타격… 中企 흔들

탄소중립으로 인한 물가상승 문제는 전력요금을 통해 이미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과 탄소 감축 의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단가가 충분히 안정화하기 전에는 전력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전국 7만81곳의 광업·제조업 분야에서 경기·인천은 2만9천365곳으로 전국의 41.90%를 차지한다. 지난 2019년에는 인천이 8곳의 업체가 사라지고 경기도는 132곳이 늘었던 반면, 2020년도에는 인천 27곳, 경기 68곳의 업체가 폐업했다.

전문가들은 인천·경기 광업·제조업체의 중소기업 비중이 90%에 달하는 만큼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원 전환, 산업구조 변화 등 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사회적 여파가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윤현서·김지혜기자 관련기사 3면

市, 영동고속道 IC 건설 내년 상반기 착공

우선 재정 사업으로 전환 후 진행
비용부담 놓고 LH와 공방 계속

인천시가 남동구에서 영동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소래나들목(IC)건설사업을 재정 사업으로 전환, 내년 상반기에 착공한다. 하지만 소래IC 건설 비용을 부담해야 할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법원 판결까지 두고본다는 입장이어서, 지루한 법정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오는 5월 추가경정예산(안)에 소래IC 건설의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예산 2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소래IC 건설은 논현2택지지구 인근의 청능대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잇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450억원이다.

시는 대법원 판결에 앞서 올 연말 한국도로공사의 영동고속도로 확장 공사와 연계하기 위해 우선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영동고속도로 확장 공사와 사업을 연계하지 않으면 최소 1천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써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만약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하더라도 부당이득금 및 건설비 이자 납부 등의 명목으로 추가 소송을 할 예정이다. 시는 당초 논현2택지지구 분양원가에 소래IC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만큼, LH가 450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보고 있다.

반면 LH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소송 포기나 사업비 납부 등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LH는 시가 추가 소송을 하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주민단체인 소래IC건설추진위원회는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사업비 450억원을 21년간 갖고 있었던 만큼, 법정이자(5%)를 포함한 833억원을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및 복지 등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용기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을 수용하라!
- 시설물유지관리업 2029년 말까지 유예 결정-

<국민권익위원회 판단>
○ 국토부장관의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결정은 업계와 충분한 논의가 안되는 등 정책 결정 과정상 하자가 있어 부당
○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보수, 보강, 개량공사만을 하고 있음에도 만능면허라고 든 폐지이유는 타당성 부족
○ 반드시 폐지해야 되는 타당성이 있더라도 충분한 유예기간 필요 함에도 3년을 부여한 것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니 2029년까지 유예하고 업계와 충분히 논의

문재인정부에서 부당하게 추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정책을 철회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존치해야 합니다!

- 경기도 시설물유지관리업 종사자 및 가족일동 -